“20년 이상 방치한 서방지하상가, 원점에서 검토하라”

1999년 시공사 부도로 공사중단 뒤 잇단 후속 사업마저 무산
문인 북구청장 “안전 문제 없다…시와 함께 효율적 활용 모색”

공사 중단 이후 잇단 후속 사업 무산 등으로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광주 북구 서방지하상가와 관련, 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활용안을 원점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광주 북구의회 김영순 의원은 15일 구 의회에서 열린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정 질의를 통해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서방지하상가의 시설 안전에 대한 주민 우려가 높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방지하상가는 1997년 착공 2년 만에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중단됐다”며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공사 재개도 좌절됐다. 이후 광주시에 무상 기부 채납됐다. 2013년 시가 추진한 LED식물·전시공간조성 민자 사업마저도 지장물 이설 문제로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130억 원을 들여 굴착한 길이 135m의 터널·시설물을 그대로 편도 8차선 도로 지하에 묻었다”며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북구는 팔짱을 끼고 지켜만 보고 있다. 주민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혈세를 낭비한 이 사업에 대해 누구도 사죄하고 책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도심 대로 아래에 텅 빈 구조물이 방치돼 있다 보니 구조물 안전성이 우려된다”면서 “특히 올해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린 만큼 빗물 유입에 따른 지반 침하·옹벽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인근에 15만V 이상의 고압선이 지나 대형 폭발 사고 등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분기당 한번씩 하는 자체 점검도 구조물을 육안 확인하고 전기 계량기·배전판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한다”며 “게다가 인근 풍향동 재개발 사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사각에 놓인 서방지하상가를 방치하는 것은 주민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것이다”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 “경기 여건 상, 민자 투자 사업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본다. 활용할 수 없다면 원상 복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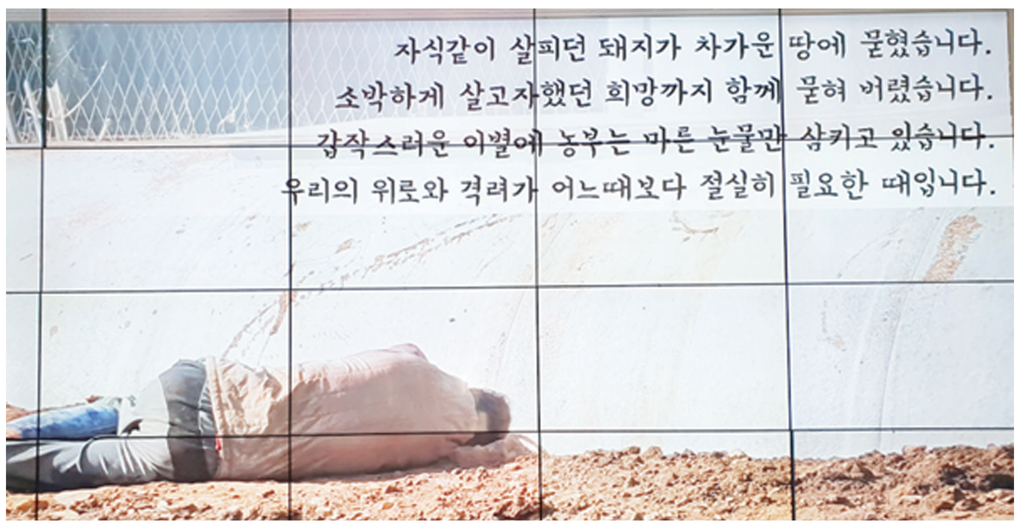
이에 대해 문인 북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돼 서방지하상가에 대한 안전을 우려하는 주민 목소리에 공감한다”면서 “1999년 공사 중단 이후 매년 구조물 상부 침하·변형 상태, 전기 시설 등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시·구 합동 점검을 진행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도시철도 2호선 계획과 풍향 재개발 사업 등 주변 개발계획과 맞물려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시는 도시철도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북구도 유기적으로 협력해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라고 했다.

1999년 공사 중단 이후 20년 넘게 방치되고 있는 광주 북구 서방지하상가 구조물.

원상복구 방안에 대해선 “구조물 상태는 큰 변형 없이 양호한 상태로 안다. 원상 복구는 시가 검토 중인 활용 방안과 풍향재개발 사업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답했다.

서선옥기자



매몰된 돼지 앞에서 오열하는 농부 15일 강원 화천군청 전광판 화면모습이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사진=화천군청 전광판 캡처)

광주노동청 “삼성전자 광주사업장 산재 은폐 의혹 조사 중”

국감서 “산재 10건 미보고 조사” 답변, 업무상 질병 등 비사고성 재해도 검토

광주고용노동청이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의 산업재해 은폐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국정감사에서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대표)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6개 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광주 소재 삼성전자 사업장 4곳에서 발생한 사고성 재해 10여 건을 보고하지 않았다. 은폐 의혹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광주고용노동청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은 산재 발생 보고의무와 발생 원인 기록·보존 의무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적발 직후 노동청은 삼성전자 측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6640만 원도 부과했다.

이어 이 의원은 '산업재해 은폐 정황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현철 광주고용노동청장은 "은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것이 은폐 정황인지 엄밀히 조사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업무상 질병 등 또다른 산업 재해로 보이는 37건도 확인, 추가 조사하고 있다"며 "사측의 (산재) 신청 방해 등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본다.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광주노동청이 중심이 돼 노사 해결을 돕겠다"고 했다.

김민정기자

‘北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냄새 나” 악플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가족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네티즌들을 검찰에 고발한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15일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로 배당됐고, 검찰은 전날 서울 관악경찰서로 수사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지난 6일 네티즌 9명에 대해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아들인 A군은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다.

A군은 편지에서 "(아버지는) 나라의 잘못으로 오랜 시간 차디찬 바다 속에서 고통받다가 사살 당해 불에 태워져 버려졌다"며 "시신조차 찾지 못하는 현 상황을 누가 만들었으며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라고 호소했다.

그러자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편지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비판성 댓글을 달았다.

댓글 중에는 "고2가 받아쓰기를 하네. 정당 대변인 논평에 버금가는 문장이네", "누가 적으라고 원고 줬나. 냄새가 풀풀 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불량마스크 10만장, ‘KF94’로 속여…中국적 20대 실형

1심, 징역 1년6개월 선고…“국민 절박함 이용”

KF94 마스크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불량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서 10만장 이상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 불량마스크들은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 A(23)씨에게 지난 7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국민들의 수요가 절박함을 이용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못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입한 불량마스크는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압수됐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 용인 모처에서 '황사방역마스크'의 포장지와 유사하게 제작된 포장지에 불량 마스크를 넣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량마스크는 정품과 달리 필터가 1개이고 분진포집효율이 7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3회에 걸쳐 정품으로 위장한 불량마스크 총 10만9930만장을 B씨 등에게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장판사는 A씨와 같이 불량마스크를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위조된 불량마스크 2만장을 판매하고 600장을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C씨는 공모해 지난 7월1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불량마스크 24만2000장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도 있다.

김미희기자